

도의회 차기 예결심사위원장 누가 뛰나?

김성수 · 한정수 의원 등 2명 거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의회, 그리고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와 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에서 한 해 동안 한 살림살이가 잘 되었는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결산심사를 하는 부서로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1년마다 새로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회계년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김성수(고창1) 도의원과 한정수(익산4) 도의원(가나나순)이 거론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고창이 지역구로 고창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고창에서 김성수 세무사를 경영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 출신 의원이다.

12대 전반기 예산결산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위원장을 도우며 전북자치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겨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경험을 살려 이번에 위원장에 도전한다.

전북과학대학 회계학과에서 강사로 바쁜 짬을 내어서 후학 지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고창발전회를 위한 고창군 애환청년회

장, 고창군 홍보소통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민사조정위원과 고창군 마을 세무사로 지역발전과 지역의 애로사항을 찾아 적극적인 지역민의 권익 옹호를 위한 일을 찾아서 하는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위의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전문영역에서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긍정적응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구에서 지원군이 많고 의정활동에 기대를 거는 주민들도 많다.

정당 활동에도 열의를 가지고 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아 당의 발전에도 적극 헌신하고 있다.

지난 5월 21에는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에 힘써 장애인복지관 전북협회

에서 감사패를 받는 등 지역의 힘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천사표 도의원으로 헌신하고 있기도 하다.



김성수 의원



한정수 의원

총학생회장으로 활발한 학생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권익 옹호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젊고 패기있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 회계업무에도 밝다. 지역구 관리에도 타고난 성실성으로 헌신해 지역의 신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도 하다.

중앙정치에도 타고난 감각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 전북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업무 수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기획국장으로 활동해 정당활동에 있어서도 정책기획업무라는 특별한 영역에서 남다른 헌신을 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도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기획국장으로 시민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기도 하다.

일찍부터 정치 활동에 몸을 던져 비교적 오랜 정치경력으로 인해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많고, 스마트하고 탁월한 정치 감각이 장점이기도 하다.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첫째,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예산을 배정하고 조차를 구축해 도민이 살기 편한 전북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조차를 개편해 전북도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도민들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약 13조 원이나 되는 큰 살림을 얼마나 잘 관리 감독해 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더욱 발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 의미가 큰 자리인 만큼 위원장의 역할과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2차전지 기업 폐수 대책 철저 준비를”

오현숙 도의원, 도정질문서

도교육청에 “시설비 낙찰차액 세부적 집행 지침 수립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 맺은 2차전지 기업들의 협약이행 현황과 계획을 물으며, “IRA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투자기업들의 지분을 변경에도 많은 관심과 함께, 2차전지 기업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에도 전북자치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은 또 새만금 호의 수질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서 “방조제 완공 후 지속적으로 상류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에 4주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새만금의 농업용수 공급처를 금강호로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새만금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기 시화호와 충남 부남호의 예를 들며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동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물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설비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관리와 감독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낙찰 차액이 교육장이나 특정 간부들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해 선심 쓰듯 사용할 우려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 차질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집행이 필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지침을 수립해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JB지산학협력단, 내부 규정·지침 미준수”

서난이 도의원 “업무 연속성 위한 조직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JB지산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은 “JB지산학 협력단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차례 개정해 현장의 혼선을 촉발시켰고, 지침 개정을 위해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라며, “지역 주요 기관의 협력이 RIS 사업과 RISE 구축의 성과를 좌우하는데 JB지산학 협력단 내부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상호 신뢰가 가능한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력단장이 대학본부장과 사업단장의 교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원활한 역할을 해야 할 협력단이 대학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이

같은 독소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규정과 지침을 개정·시행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JB지산학 협력단은 2023년 9월 출범 후 지난 5월 중순까지 RIS총괄 운영본부운영지침과 RIS사업비 관리 및 세부 집행기준을 각 3차례씩 개정하면서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커녕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JB지산학 협력단은 대학과 전북자치도에서 파견된 인력이 60%정도 되는데, 1년이 되면 각 기관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과 기업이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과 기업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책을 마련할 것과 기업 전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차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RIS사업과 RISE 구축은 지자체와 대학 및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사업을 리딩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JB지산학 협력단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해야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말로만 청년참여예산제, 실제 실적은 없어”

김솔지 도의원, 도정질문서 “2년간 청년정책과장 변경만 4차례... 신규 사업 발굴 저조”

1년 넘는 시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 추진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솔지 의원(비례)은 지난 7일,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청년참여예산제’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김솔지 의원은 “도내 청년 누구나 손쉽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또는 이런 수요를 모아 도정에 반영한다는 ‘청년 참여 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전북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뷰 등을 통해 청년참여 예산제를 홍보하고, 필요성 언급했던 도지사의 말과 달리 현재 추진 실적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에 예결위에서 심사한 후 심사보고에서 부대 의견으로 청년참여 예산제의 경우 전북도가 직접 추진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도정질의 답변서와 청년정책과의 보고 자료에도 지속적으로 청년 참여 예산제에 대한 추진 상황과 추진 주체에 대한 점검 검토와 더불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년참여 예산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과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허브센터에 편성된 공간 위탁 사업비 8억 중 청년참여 예산제로 편성된 2억 원은 전북도가 직접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문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환경보전기금 설치 철학·원칙 찾기 힘들어”

이명연 도의원, 전북자치도 소극적 친환경 정책 질타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먼저 이명연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000년 1월 7일 제정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지만 “기금 적립과 운용 모두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타했다.

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기금이 조성돼야 하는데, 2022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28억1,300만원에 불과하다. 타 시·도의 기금 현황과 비교해 보면, 전북 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이명연 의원은 특히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폐기물처리 부담금, 생태계보전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배출 부과금, 수질 개선 부담금 등의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연 의원은 “희망 시·군의 지역축제에 대해 대화용기 대여 및 세척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축제 대화용기 대여 사업 역시 관리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지역축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화용기 사용과 반납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태권도원 활성화,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윤정훈 도의원, “행정부지사 태권도진흥재단 이사 직무 수행을 태권도원 민자유치 제안서 제출 기업 전무... 지원 방안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4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서실 것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하고 10년 동안 약 250만 명이 방문해 국가(國技)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며, 국내 외 태권도 발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하지만, 태권도원 관련 시책에 대해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으로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로서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행정부지사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로서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정훈 의원

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정훈 의원은 “2022년 태권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 3년 동안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태권도원 민자유치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정훈 의원은 “태권도원의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태권도원을 관할하고 있는 설천 119 지역대의 소방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태권도원 뿐 아니라 무주 반디랜드 등 관광지지의 잠재적 수요를 대비해 설천 119 지역대의 이전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만호 기자